

대량해고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랜드일반노동조합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하라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의 요구는 우리 모두의 요구다

>> 관련 기사 3면

위험천만한 레바논 파병 중단하라

>> 관련 기사 12면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4면



21세기 혁명

- 최일봉 '다함께' 국제연락간사

6~7면

노동자 투쟁

- 연세의료원 파업

- 부산지하철 청소 노동자 승리

11면



KBS 이강택 PD 인터뷰

- 한미FTA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

5면

정성진 칼럼

- 자율주의와 '비물질 노동의

헤게모니'론 비판

9면

지금중 전 문화연대 사무총장

2007 대선과 진보대연합

10면

www.counterfire.or.kr

새롭게 개편된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자이 자일스 웅파콘 인터뷰

타이 '쿠티에' 반대하는 9월 19일 네트
워크를 주도한 자이 자일스 웅파콘에게
듣는 쿠티에의 본질과 민중 저항

베네수엘라 혁명의 미래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의 저자인
마이클 곤살레스가 베네수엘라 노동계
급이 직면한 대인들을 살펴본다

고려원전 수명 연장 시도 중단하라

수명이 다한 고리 핵발전소를 10년 더
연장 가동하겠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을
고발한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호는 여름 휴가철을 고려해 8
월 12일에 발행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베트남 여성은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순수함을 지닌 천사 ... 남편에게 헌신적이고, 몸매가 환상적”
- 해남군의 국제결혼 협조 공문 중

“국민들이 그동안 ‘한미FTA 그거 좋은 거 아냐’ 그랬는데 이번에 파업하니까 ‘뭐 문제 있냐’ 이렇게 바뀌었잖아. 금속노조 성공한 거 아냐?”
- 전경련 관계자의 걱정

“[7월 3일 사학법 개악안 야합 처리는] ‘통합열린한나라민주당’의 창당을 선언한 것 ... 반한나라당 대통합의 명분도 산산이 사라졌다.”
- 사학법개정국민운동본부

“한나라당의 가증스러운 모습은 악랄한 친북좌파보다도 더 부도덕하다. 한나라당 안에 친북좌파가 침투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에 분노한 조갑제

“조합원들이 불법 파업에 대해 뉘우치게 해 주십시오”, “불법 파업으로 고객들이 매장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 이랜드그룹이 직원들에게 하달한 기도문 중

“부자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게으르고 무책임하다.”
- 조갑제

평화와 진실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지난 10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씨의 재판이 있었다. 이 씨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직접 들고 나와 “국가보안법은 창작·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검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자료들 중 상당수는 이 씨의 예술 작품들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작가가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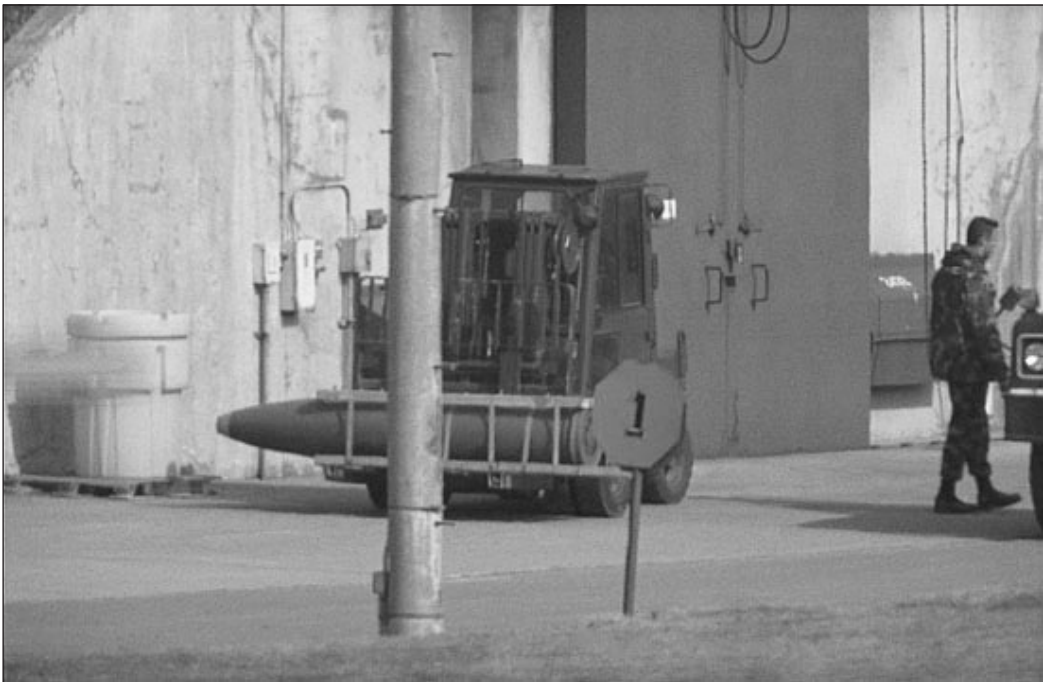
무려 2시간 30분에 달하는 열정적인 모두진술에서 이 씨는 자신의 노력이 전쟁 반대와 평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씨에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먹고사는 경제 문제보다 죽고 사는 전쟁 문제가 더욱 큰 문제임을 깨닫는 계기”였다.

이후 그는 열화우라늄탄이 배치된 주한미군 기지 현황, 대인지뢰 살포 현황, 핵잠수함 진해기항 사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 등을 지속적으로 폭로해 왔다.

“지금도 부산에 있는 잠수함이 핵무기인 핵토마호크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4척 중 하나 꼴로 무척 높습니다. 부산 다대포에서 원자력 잠수함이 선박과 충돌했을 경우 부산 전체가 핵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새롭게 떠오른 동탄 신도시 부근에 열화우라늄탄 50만 발을 보관한 탄약고가 있습니다. 열화우라늄탄은 사고가 나면 순간 신도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배자들이 국가보안법을 통



“이 사진은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오산 미공군기지 탄약고를 찍은 것입니다. 사진 왼쪽에 있는 물통에는 금지된 화학무기인 ‘백린탄’이 보관돼 있습니다. 최근 팔루자에서 미군이 이라크 민간인을 학살할 때 백린탄이 사용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백린탄이 제가 찍은 백린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시우 씨가 재판정에서 들려준 사진 이야기

해 이 씨의 입을 막으려는 이유는 이러한 진실들을 감추기 위해서다.

비록 국가보안법은 그의 몸을 좁은 철창 안에 가뒀지만 이 씨의 말처럼 “구속은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것”일 뿐이다.

그가 찍은 사진들은 전국 곳곳에서 전시되며 국가보안법의 폐해와 반전평화의 외침을 알리는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우봉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씨의 사진은 ‘다함께’가 주최하는 진보포럼 ‘맑시즘2007’에서 “표현과 창작의 자유, 감옥에 갇히다”라는 주제로 전시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위한 학생 공동투쟁기구 결성

국가보안법의 칼 끝은 학생운동도 겨누고 있다. 한총련 전·현직 활동가들이 6월 한 달 동안에만 5명이 연행됐고, 이른바 ‘한총련 배후조직’에 대한 수사도 더욱 확대될 듯하다.

학생운동 진영에서는 정견과

사상의 차이를 떠나 마녀사냥에 맞선 공동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공감대가 모여 7월 10일 ‘학생운동 공안탄압 분쇄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학생대책

위’ 결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한총련, 한대련, 대학생 다함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활동가들은 향후 공동 투쟁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최미진

‘정신나간 콩가루’들의 아귀다툼과 ‘잡탕 대통합’

강재섭의 한탄처럼 한나라당이 갈수록 “정신나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있다. 이명박의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인 김재정이 이명박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박근혜 측근들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뒤늦게 강재섭이 “우리의 운명을 검찰의 칼 끝에 맡긴 꼴”이라며 고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의 칼은 이미 ‘벌집’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쪽도 “17대 대통령은 계좌 추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고소 취하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다가 또 진다”(전여옥)는 걱정도 권력에 눈이 멀어 아귀다툼하는 이명박·박근혜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이기든 양쪽의 ‘화학적 결합’은 물 건너 간 듯하다.

이명박은 항상 ‘권력의 심부름센터’였던 검찰의 생리를 믿고 싶겠지만, 지금 검

찰은 박근혜와 범여권의 눈치도 봐야 하는 처지다. 이명박에게 검찰 고발은,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터지던 온갖 추문들을 덮기 위한 도박이기도 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의혹들은 재산 신고액 3백31억 원 중에 부동산만 3백25억 원이라는 이명박이 왜 ‘종부세 폐지’를 내걸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위장 전입, 성접대, 부동산 투기 등 끝없이 이어지는 의혹과 추문 속에 이명박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특히 30□40대와 무당파 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박근혜 지지로 옮겨가지 않았다. 결국 이명박·박근혜의 지지율은 하향평준화하고 있다.

이처럼 지지율의 거품이 빠져 전통적 우파 지지층만 남게 되면 한나라당 집권은 힘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극우의 조갑제에게 “투항주의의 쓰레기”라는 욕까지

먹으면서, 정형근이 앞장서 대북 유화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의 ‘짜통 햇볕’에 속을 리가 없다.

난파선

놀라운 점은 아귀다툼하는 부패한 한나라당과 더러운 오점 투성이 이명박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바로 대안 부재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손잡고 국민연금·사학법 개악을 통과시킨 후 “반한나라당이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문희상)고 뽀뽀스페 말하는 개혁 사기꾼들 덕분인 것이다.

‘대통합’에 나선 김근태는 “친노, 반노, 비노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개악 야합과 개혁 배신에서 이들의 차이는 없었다. ‘대통합’을 둘러싼 갈등

은 단지 주도권 다툼일 뿐이다. 천정배도 “개혁 순혈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며 ‘잡탕 대통합’을 옹호했다. 노회찬 의원의 지적처럼 이런 ‘대통합 난파선’에 손학규 같은 ‘쥐’가 한 마리 더 올라타면 더 빨리 가라앉을 뿐이다.

따라서 미래창조연대가 진보의 기준을 ‘한미FTA 비준 다음 국회 연기’로 후퇴시키면서 이런 ‘잡탕 대통합’에 함께하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래창조연대 최열 공동대표는 “지구 온난화 대재앙이 오는데 ... 한미FTA 반대한다고 진보인가”라고 했지만, 정태인 교수의 지적처럼 “환경운동이야말로 한미FTA 반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상”이다.

한미FTA와 비정규직 차별, 전쟁과 반민주 악법들에 반대하는 진정한 진보 세력의 ‘진품 대통합’이 필요하다.

전지윤

“우리가 힘이 세다는 것을 느껴서 통쾌했어요”



여성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투사로 변신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도 많이 변했어요.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 앞장서는 것은 싫어했죠. 그런데 투쟁을 하면 할수록 회사에 대한 분노가 커졌어요. 회사는 직원들이 왜 파업까지 하게 됐는지는 눈곱만큼도 생각을 않고 있죠.

[회사기] 양심이 있다면, 주부 사원들이 찬 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요구를 백분의 일이라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딸은 약삭같이 돈을 벌어서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싸워도 인정을 못 받는다면, 이런 말을 들으면 서러워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참고 있었어요. 우물 안 개구리였죠. 이제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했습니다. 농성을 지속하면서 조합원들도 여러 일들을 맡아 하고 있어요.

주부들은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 가는 게 보통인데, 투쟁을 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7월 8일 투쟁으로 20여 개 매장의 영업을 완전히 중단했는데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비정규직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 -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이 승리의 열쇠다

힘이 있다면 전국의 홈에버 매장을 다 멈추고 싶었어요. 그래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 연대한 동지들의 힘으로 많은 매장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상암 거점을 사수하고 있었는데 다른 매장에 다녀온 조합원들이 정말 신나 했어요. 우리가 가니까 이미 셔터를 내리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힘이 세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정말 통쾌했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이 되고 있는 데요.

저는 비정규직인데 내가 정규직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싶어요. 비정규직 투쟁이 나의 문제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좀 더 강도 높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교섭은 교섭이고 투쟁은 계속돼야 합니다. 거점을 고수하면서 하루에 한 매장씩 타격하기로 했어요.

손배가압류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그제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했으면 겁먹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정당한 요구를 갖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 남더라도 끝까지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남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목소리도 못 내는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죠. 이들에

게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할 겁니다.

우리가 꼭 승리할 테니,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용기를 내서 자기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죠. 우리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연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인터뷰·정리 박설

뉴코아·이랜드 파업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한마당

일시 : 2007년 7월 17일 저녁 6시~11시
장소 : 고려대학교 민주광장(학생회관 앞)
주최 : 뉴코아·이랜드일반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티켓 구입 문의 : 010-3434-7683

뉴코아·이랜드 점거 파업을 사수하라

전지윤

“차별로 가슴에 피멍이 들어도 참아야 하는 세상을 더는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작정한 못나고 평범한 엄마·아빠들의 투쟁”이 거침없는 진군을 계속하고 있다.

7월 8일 뉴코아 이랜드 점거·봉쇄 확대의 날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수많은 노조·학생·사회 단체들이 동참해 애초 계획했던 12개를 넘어 21개 매장을 점거·봉쇄했다.

이랜드는 이 날 하루에만 65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더구나 점거 파업의 거점이 홈에버 상암점에서 뉴코아 강남점으로 확대됐다.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의 해방구”가 2개로 늘어난 것이다.

노동자들의 가공할 힘에 직면한 박성수는 “기업에 대한 테러” 운운하며 불평했다. 그러나 무더기 해고와 외주용역화로 노동자들을 ‘테러’해 온 장본인은 박성수다.

박성수의 ‘테러’에 힘없이 당해 오던 노동자들이 저항을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평범한 주부였던 여성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강철 같은 투사로 변신해 영웅적인 용기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의 투지는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지도부가 강력한 연대와 투쟁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도록 등 떠밀고 있다.

지배자들도 분열하기 시작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사측이 조금만 더 고민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평했고, <조선일보>조차 “이랜드그룹이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로 대처했다”고 말할 정도다.

기간제로 비정규직을 마음껏 부려먹다가 2년 안에 해고하거나 파견·용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보장해 준 비정규직 악법이 투쟁을 촉발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대량해고로 기간제는 줄면서 파견·용역직이 크게 늘었고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은 30만 명이 늘었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되레 “비정규직법이 정규직화를 강제하면서 … 난데없는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중앙일보〉)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상수는 “정규직 임금을 성과급으로 바꾸고 더욱 유연하게” 하는 게 대안이란단. 비정규직을 평생 정규직화하지 말고, 정규직도 비정규직 수준으로 끌어내리자는 것이다.

이 같은 비정규직 확대와 정규직 공격 계획이 점거 파업이라는 강력한 장벽에 부딪히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주영은 “노동계의 투쟁 만능주의 확산의 신호탄이 되지 않도록 … [정부의] 단호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가족을 버리고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투지 앞에 경찰력 투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내 발로, 빈 손으로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여성 노동자들은 경찰력이 투입되면 알몸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전기를 끊고 경찰력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타결됐

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불안감과 혼란을 조장하려는 꼼수나 쓰고 있다.

하지만, 이미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강력한 투쟁과 아름다운 연대로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감동과 자신감을 주고 있다. 이것이 최근 코스콤비정규직지회의 승리, 부산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승리, 광주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승리에도 밑거름이 됐을 것이며 곳곳에서 비정규직 투쟁과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을 고무했을 것이다.

이 투쟁은 우리은행·보건의료노조처럼 ‘비정규직을 위한 정규직의 양보’가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이 진정한 대안임을 보여 줬다.(관련 기사 8면)

“1천5백만 노동자들의 자존심이 걸린 건곤일척의 싸움”(뉴코아·이랜드 공동투쟁본부)을 반드시 통쾌한 승리로 마무리해야 한다.

박성수를 벌벌 떨게 할 단호한 점거 파업 지속·확대와 강력한 연대(연대 집회와 연대 파업)가 승리의 열쇠일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어디로?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의 혁명적 과정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자본주의와 분명하게 결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사태 전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베네수엘라의 운동은 단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대안을 건설하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또, 차베스는 촘스키부터 트로츠키까지 다양한 급진적 사상가들을 인용하면서 단지 자본주의의 폐해뿐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볼리바르 식 혁명과 “21세기 사회주의”는 대안세계화 운동의 일보 전진을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베네수엘라의 변화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베네수엘라의 기존 자본주의 국가가 아직 분쇄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아니라 볼리바르 식 혁명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완결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차베스가 비록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하지만, 그가 말하는 사회주의의 의미는 분명치 않다. 차베스는 예수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19세기 라틴아메리카 해방 운동의 지도자였지만 일종의 군사 독재자였고 말년에는 계몽군주제를 지지한 시몬 볼리바르의 열렬한 추종자이기도 하다. 올해 초 차베스는 트로츠키주의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자신도 트로츠키주의자라고 말했고, 지난 4월 22일 방송에서는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과 이행기 강령을 지지한다며 국민들에게 트로츠키의 저작들을 읽어 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트로츠키

트로츠키는 《러시아 혁명사》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중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말했다. 이 점에서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 대중이 “정치 무대에 자신들의 접근을 막아 온 장벽들을 부”수고 “이것들을 뛰어넘어 기존의 대표 기구들을 쓸어버”리고 “직접 개입하여 새로운 체제의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혁명이다. 이 점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아직 혁명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최상의 빈곤 퇴치 방법은 권력을 민중에게 주는 것이라는 차베스의 말에 자극받고 투쟁 경험을 통해 의식이 고양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인수해 자주관리·공동경영에 나서고, 농민들이 토지개혁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점거하고, 빈민들이 주택과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조직화에 나서는 등 “대중의 직접 개입”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존의 대표 기구”, 즉 차베스가 집권 전부터 물려받은 기

존의 국가 기구도 여전히 건재하다. 반차

베스 진영의 소수 특권층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근본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 관료 집단은 차베스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개혁을 마지못해 실행하거나 심지어 좌절시킨다. 그래서 차베스 자신도 볼리바르 식 혁명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내부에 있다”고 한탄하고 “국가 기구 내부의 이 관료적 반혁명 때문에 [개혁 정책들이] 일탈”할까 봐 우려했다.

이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차베스는 통합사회주의정당(PSUV)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PSUV가 아래로부터 건설될 것이라는 전망과 견해도 있지만, 실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베네수엘라의 기층 활동가들 일부는 상명하복식으로 다양한 좌파 인사들에게 PSUV 가입 압력이 가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처음에 이런 압력에 저항하던 UNT 지도부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조직을 PSUV에 가입시키기로 방침을 바꿨는데, 차베스의 구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서라기보다는 전술적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PSUV 건설이 올바른 조처냐 아니냐는 당연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이고, 진정으로 통일된 좌파 대중 정당은 유기적인 논쟁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준(準)강제적 통합은 PSUV가 정부의 관료적 전달 장치로 전락할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다.

또, PSUV는 지금의 차베스 진영 내의 모순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지금 차베스 진영 안에는 근본적 정치 지향이 다른 세 경향이 있다. 첫째, 이제는 개혁의 “균히

기”에 들어가야 하고 자본가들과 상층 계

급의 특권을 더는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 둘째, 쿠바 식 권위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경향(그런데 지금 쿠바의 권력자들은 권위주의와 시장을 결합한 중국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철저한 사회 변혁과 자본주의의 파괴와 대중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경향. 이 사뭇 다른 세 경향을 하나의 조직으로 뭉뚱그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모순

그리고 정치 권력의 궁극적 토대인 경제 권력도 여전히 옛 소수 특권층의 수중에 남아 있다. 차베스의 개혁 조처들은 베네수엘라 자본가 계급의 부와 재산에 타격을 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빈부격차가 확대됐다고 차베스 자신이 인정했다. 고유가 덕분에 석유 판매 수입(收入)이 증대하자 빈민들의 소득보다 부자들의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생산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생산물의 분배 결과가 조금씩 바뀌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베네수엘라 변혁의 성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차베스의 실험이 직면한 장애물들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미국이 비록 이라크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이른바 “차베스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지배계급들의 노력은 페루와 멕시코 대선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또, 차베스는 자본주의를 넘어 21세기의 사회주의로 나아가자고 주창하지만 그 자신은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

가 기구의 수반이라는 모순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들은 대중운동이 낡은 국가 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민중 권력 기구들을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 때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혁명적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기 시작한 베네수엘라의 조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취약하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 이 조직 노동자들이 혁명의 주체로 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베네수엘라 혁명의 심각한 약점이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베네수엘라의 사회운동과 변혁이 승리로 끝나기 바라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출발은 무엇보다 미국 제국주의와 베네수엘라의 소수 특권층 모두에 맞서 싸우는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대중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국의 노동조합 등 기층 대중 조직들과 베네수엘라의 대중 조직들 사이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긴밀하게 발전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의 다양한 급진적·혁명적 좌파들과 대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의 운동들을 옹호하면서도 볼리바르 식 혁명의 불균등성·모순·한계도 직시하며 베네수엘라 운동들과 진지한 정치적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사회포럼 토론회 발표문을 줄인 것으로, 원문은 <빛불>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6월 2일 차베스 정부의 RCTV 방송 면허 취소 결정을 지지하는 시위

“식량조차 돈벌이에 종속되는 게 한미FTA입니다”

7월 4일 방영된 <위험한 연금술, 유전자 조작 식품>을 통해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을 폭로한 KBS 이강택 PD를 만나 한미FTA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들었다.

먼저 유전자 조작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적인 종자 개량은 좋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와 일반 개체들을 계속 교배시켜 좋은 형질이 태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개량 폭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같은 종에서는 구할 수 없는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떼어내 결합하는 거죠. 유전자 조작은 검증이 안 된 것이고,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대단히 불안정한데, 이것은 장기적으로도 해결하기 힘들 겁니다.

목표 유전자 하나를 넣으려면 이와 함께 몇 가지 다른 유전자도 같이 들어가야만 하는 데다가 유전자가 어디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유전자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현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유전자가 2만 개고 바퀴벌레도 2만 개라고 하는데 그 작용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죠.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위험한 연금술, 유전자 조작 식품>의 한 장면 – 유전자 조작 연어는 머리와 장기에 심한 기형이 나타났고 제대로 헤엄치지도 못한다

1998년에 스코틀랜드의 푸스타니 박사가 쥐에게 유전자 조작 감자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상 최초의 동물 실험이었죠. 또 다른 것은 BBC가 보도한 것인데, 닭에게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였더니 보통 닭보다 50퍼센트 정도 높은 폐사율을 보였습니다.

또, 영국의 뉴캐슬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것인데, 사람의 장에서도 유전자 조작 성분이 위장 속 미생물에 남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어도 소화가 돼서 DNA가 다 파괴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잔존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유통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스타링크 사건’이 있습니다.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옥수수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식용으로 광범하게 쓰인 게 밝혀진 거죠.

유전자 조작 식품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이 모자라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3세계 ‘식량난’의 문제는 제국주의 시대부터 강요된 상업적 모노컬처[단작재배]의 폐해입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이 굶어죽는데 쓸만한 농지에서는 외국에 판매할 커피 등을 재배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유전자 조작 연구의 80퍼센트는 제초제 저항성입니다. 거대 농화학 기업 몬산토가 ‘라운드업’이라는 맹독성 제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초제의 특허가 1990년대 초에 만료돼 가자, 이걸 더 팔기 위해 자기네 제초제를 건디는 종자[라운드업레디]를 만들어 세트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자는 특허를 받아 일반 종자보다 4~5배 가량 비싸게 팝니다.

제초제 사용은 계속 늘었고, 이제는 이 강력한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 잡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대 식품회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식량 생산을 자신들에게 완전히 종속시키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종자, 화학비료, 제초제를 계속 구입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나라의 ‘GMO 표시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한미FTA를 통해 이런 표시제마저 더 악화될 뻔한데요

우리 나라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콩과 옥수수 식품을 조사해 보면 GMO가 100퍼센트씩 나옵니다. 2005년에 식약청에서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표시가 안 됩니다.

일단 음식점에서는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옥수수 전분 같은 것은 튀김류나 과자 등에 많이 쓰이지만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우리 나라는 올 가을에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를 발효해 이런 것들[GMO 표시제 등]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이 의정서에 연관된 법들이 사실상 무력해지고, 이를 개정하려면 미국이 동의해야만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나라에 존재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데 가장 기본으로 필요한 식량조차 기업의 돈벌이, 이윤 추구에 종속되는 거죠.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게 광우병과 유전자 조작 식품이 아닌가 합니다.

인터뷰 · 정리 강동훈

이강택PD는 ‘맑시즘2007’에서 ‘유전자 조작식품(GMO)의 정치경제학’(7월 16일 오후 2시 30분)이란 주제로 연설했다.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체결에 이어 한EU FTA까지 추진중이다. 오는 7월 16일 한EU FTA를 위한 2차협상이 브뤼셀에서 열린다. FTA 협정의 최혜국 조항에 따라 한미FTA의 독소 조항들이 한EU FTA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한미FTA를 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나라당과 범여권 세력은 한미FTA를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않기로 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한 듯하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미FTA 반대 단식 농성까지 벌인 김근태가 찬성론자인 손학규를 대통합으로 불러들인 것을 두고 “중도개혁파의 정신분열”이라고 꼬집었다.

그와 동시에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반대 운동을 무차별 탄압하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본의 오종렬·정광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도 “국회 인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을 계기

로 노무현 정부는 정갑득 위원장을 포함한 28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한미FTA저지 투쟁에 큰 기여를 한 전국농민회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도 고려하고 있다.

한미FTA저지 운동에 대한 탄압이 야금야금 시작되더니 이제는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한미FTA저지범국본은 ‘탄압 저지’를 하반기 투쟁의 주요 기조로 정하고, 두 대표의 구속에 항의하는 농성을 7월 2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사실, 범국본의 두 대표가 자진 출두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다. 범국본 서울본부의 소환자들도 출두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제라도 범국본은 검찰 소환 불응을 호소하며 소환 대상자들이 공동 대응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또, 최근 벌어지는 국가보안법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한미FTA 비준저지 투쟁을 준비하며, 연말 대선 정국에서 한미FTA 쟁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투쟁 건설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도 비준 저지를 위한 더 강력한 2차 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이정구



최일봉
‘다함께’ 국제연락간사,
전 〈맛볼〉 편집자,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책갈피) 저자

“21세기 혁명”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혁명의 의미부터 살펴봐야겠다. 왜냐하면 옛 소련 몰락 이후 그 사건을 “사회주의의 실패”와 “맑스주의의 위기”로 받아들이는 관점이 여전히 대세인 데다 최근 신보수주의자들조차 “민주주의 혁명” —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해 강제로 ‘정권교체’와 신자유주의를 실시하기 — 운운하는 지경에 이르자 좌파의 사상적 혼란이 한층 심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세계화운동의 선두주자인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맑스주의자 존 홀러웨이는 이렇게 말한다. “혁명적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절박하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홀러웨이,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갈무리, 327쪽)

프랑스 등 서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반신자유주의 운동가 중 하나인 수전 조지도 유럽사회포럼에서 “‘자본주의의 타도’라는 게 21세기 초에 뭘 뜻하는지 더는 모르겠다고 고백해야겠다”고 했다.

혁명이 뭘 뜻하는지 이해하려면 일단 보안경찰과公安검사 등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단죄하는 ‘혁명’은 진정한 혁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혁명’은 모반(謀叛), 즉 한 줌밖에 안 되는 전사·게릴라·군인 등이 비밀리에 조직하는 무력 정변일 뿐이다. 극우 논객 조갑제는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부르면서 뿌듯해 한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에 의한 것만이 진정한 혁명이다. 이런 혁명 개념만이 고전 맑스주의 전통에 따른 용어법 — 가령 ‘혁명적 사회주의’, ‘혁명적 정당’, ‘혁명적 전략’ 등 — 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론적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트로츠키의 경구(警句)를 빌어 말하면, 혁명은 “대중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는 영역으로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다(트로츠키, 《러시아 혁명사》, 풀무질, 상권 14쪽).

5·16 따위는 진정한 혁명이 아니라 그람시 특유의 용어인 “수동적 혁명”에 속한다. “수동적 혁명”은 극소수 근대화 엘리트 집단의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해 전통적 사회관계들이 철저하게 변모하는 것을 말한다. 19세기 중반 이탈리아 통일(리소르지멘토), 19세기 후반 독일 비스마르크의 이른바 “국가사회주의”적 개혁, 일본의 메이지 유신, 1928년 이후 스탈린의 소위 “제2혁명”, 파시즘, 1989/91년 옛 동구권 붕괴 후 들어선 정권들에 의한 개혁 등은 물론이거니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체가 “수동적 혁명”의 사례들이다.

혁명이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볼 때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식 혁명”은 혁명인가? 대답은 ‘예스’인 동시에 ‘노’라 할 수 있다. 위로부터의 차베스 주도 자체만 보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다. 하지만 그 주도에 대한 대중의 응답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건설 등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보면 그것은 혁명이다.

혁명이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만으로는 혁명에

대한 정의로 충분하지 않다. 그 대중 행동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맑스의 ‘정치 혁명’ / ‘사회 혁명’ 개념이 유용하다.

맑스는 국가 권력의 급속하고 강제적인 변혁만 일어나는 경우는 단순한 정치 혁명이라고 했고, 정치 혁명이 더 넓은 사회 변혁 과정을 결정적으로 가속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사회 혁명이라고 했다.

사회 혁명은 정치 혁명을 포함한다. 네그리와 홀러웨이 등 맑스주의자를 표방하는 자율주의자들이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며 정치 혁명을 배제한 사회 혁명을 얘기하는 것은 맑스의 사회 혁명 개념과 전혀 관계 없는 것이다.

오히려 베버 학파의 역사사회학자 테다 스코치폴이 사회 혁명에 대해 정의한 바, 즉 “사회 구조와 정치 구조의 근본적 변동이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맑스의 사회 혁명 개념과 부합한다(스코치폴, 《국가와 사회혁명》, 까치, 18쪽).

1640년 영국 혁명, 1776년 미국 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1949년 중국 혁명은 사회 혁명이었다. 반면, 1960년 한국의 4·19와 근래 몇 년새 라틴아메리카의 볼리비아 등지에서 일어난 반란은 분명히 혁명이긴 했으나, 사회 혁명은 아니었고 단순한 정치 혁명이었다. 물론 볼리비아의 경우 몇 년 안에 사회 혁명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라 혁명을 정의하면,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으로 근본적 정치·사회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식 혁명’의 모순적

혁명은 언제 일어나는가?

21세기에도 이런 의미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 ‘순전한’ 정치 혁명은 지난 6~7년 동안에만도 벌써 몇 차례나 일어났다(2000년 에콰도르, 2000년 세르비아, 2001년 아르헨티나, 2005년 볼리비아 등).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경제의 회복은 짧아지고 부진은 더 길어지는 식으로 경제 위기가 질질 끄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지배자들은 경쟁 격화에 대처하기 위해 억압과 비민주성을 강화하고, 전쟁이 계속 빈발하고,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은 재난이 엄습하는 상황에서 피지배자들이 삶을 점점 더 참기 힘든 것으로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대중 반란이 반드시 일어나지는 않는다. 고통은 민중이 투쟁하게 만들기보다는 오

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서로 분열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배계급도 경제와 정치의 위기 상황에선 쉽사리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뒤죽박죽과 당혹과 잦은 실수를 하게 된다. 위기가 심각하면 그들은 일이 잘못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비난하고, 경쟁자를 희생시켜 곤경을 벗어나려 한다. 이런 아귀다툼이 격화하면 그들의 선전 기구와 억압 기구도 내홍에 휘말려, 언론 매체와 검찰 같은 기구들이 지배자들 사이의 상호 공격에 동원되곤 한다. 심지어 일부 지배자들은 대중을 동원해 라이벌을 제거하려는 모험까지 감수한다.

지배자들 간의 이런 쟁투와 내분은 피지배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고 때로는 거대한 저항을 고무하기도 한다. 특히 전쟁은 종종 혁명을 일으키곤 한다. 가령 러일전쟁의 여파 속에서 러시아 1905년 혁명이 일어났다. 제1차세계대전 중에

“혁명이란, 대중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는 영역으로 강제로 들어가는 것” - 트로츠키

지난 몇 년 새 라틴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등지에서 일어난 혁명들은 앞으로 수십년 새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보여 주는 것이다.

민중 권력과 혁명 정당

거침없이 세계화하고 있는 21세기 자본주의 하에서 세계의 어디에선가 정치 혁명이 일어나는 건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 혁명이 사회 혁명 상황으로 발전하느냐는 결코 필연이 아니다. 또, 사회 혁명이 승리하느냐도 필연이 아니다.

단순한 정치 혁명이 사회 혁명 상황, 즉 온전한 의미에서 혁명적 상황으로 발전하려면 아래로부터 민중 권력이 등장해야 한다. 파리 코뮌 때의 코뮌, 러시아 혁명 때의 소비에트 등이 그것이다.

진정한 민중 권력은 아래로부터 건설되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대중 조직이다.

민중 권력 기관은 생산은 물론이거니와 물·전기·가스 등 필수 서비스와 식료품, 의약품, 교통수단 등도 관리해야 한다. 언론 매체도 접수해야 한다.

코뮌이나 소비에트의 대표는 선출돼야 하고, 그 대표는 노동자 평균 임금만을 받아야 하고, 직책 수행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소환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기층대중 권력 기관은 1871년 파리 코뮌 때나 1905년과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1918 i 19년 독일에서처럼 자생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지만,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처럼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05년 6월 볼리비아 봉기에서도 이렇다 할 정도로는 등장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도 현재로선 그다지 다르지 않다.

조직된 혁명가들의 개입 없이 정치 혁명이 사회 혁명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발전이 확실해지려면 그들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런 기층 민중 권력과 기존 국가 권력은 한동안 병존한다. 이를 두고 “이중(이원) 권력”이라 한다.

이원 권력 상황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조만간 한쪽이 살려면 한쪽이 죽어야 하는 운명의 시간이 도래하게 마련이다. 이 때 개혁이나 혁명이나 하는 고전적 문제가 더욱 첨예해진다.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자율

주의식 문제 회피는 운동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이 때 혁명적 정당의 구실이 사활적이다.** 이것이 앞에서 필자가 사회 혁명의 성공도 필연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다.

노동계급의 중요성

그런데, 민중 가운데 과연 어느 부분이 민중 권력 창출을 주도할 실제 힘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사실, 모든 혁명은 민중 혁명이다. 따라서, 민중 혁명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중 가운데 어느 계급이 다른 천대받는 사회집단들에 “헤게모니”(다른 사회집단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력을 특별히 일컫는 용어)를 행사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 얘기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노동계급이다. 어떤 심각한 위기 속에서든 지배계급은 민중에게서 가장 증오받는 인물 몇몇을 제거하고 몇몇 개혁을 실행하는 등의 양보 조치로 시간을 벌면서 구제제의 골간을 유지하려 애쓴다. 특히 공장과 사무실, 은행, 광산, 토지 등에 대한 지배권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경찰과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애쓴다. 지배계급이 절대 놓지 않으려 닦은 애를 쓰는 이 두 가지 수단, 즉 생산 수단과 탄압 수단의 내부에서 상향식으로 대중 조직을 건설할 수 있는 사회세력은 노동계급과 보통의 군인들이다.

21세기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노동계급은 단지 대공장에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분할매각, 외주, 아웃소싱, 특수고용직, 임시·비상용직의 시대에 노동계급은 소규모 작업장·사무실의 종업원 형태로

도 광범하게 존재한다.

대공장 노동자들은 혁명 상황에서 소비에트를 창출하겠지만(만약 한다면), 소규모 작업장과 사무실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그 지역사회의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코뮌을 창출할 것 같다(만약 한다면).

대공장 노동자든 다른 종류의 노동자든, 특정 노동자 집단이 수행하는 노동의 종류와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심장인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착취와 천대가 없는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 건설의 주역이 되기에 적합한 생활조건 속에 존재한다. 노동계급은 집단적 계급인 것이다. 물론 개별 노동자들은 다른 사회집단의 개별 성원들보다 특별히 덜 이기적이거나 덜 개인주의적이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기 생계를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조건을 개선하거나 지키려면 집단으로 행동하고 조직해야 한다. 수면 시간이 아닌 깨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노동자들은 직장(출퇴근 시간 포함)에서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보낸다. 출신은 다양해도 거의 다 비슷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살아간다. 특히 사용자의 착취 강화 기도에 맞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등 단체로 조직하고 행동해야 한다.

혁명 상황에서는 수구적 장교들에 맞설 수 있는 사병들과 하급 지휘관들의 민주적 대중 조직이 필수적이다. 물론 이 문제에서도 군대 내에서는 밀히 활동할 혁명가들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물론 이것은 당면한 한국 상황에선 추구할 과제가 아니다.

20세기는 물론 21세기 초의 지난 몇 년 새만도 우리는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불안정이 빈발하는 가운데 민중 권력이 돌연 현실적 가능성이 되는 것을 힐끗 목격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재연될 것이다.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다음 번 반란 때는 민중이 단지 역사의 문턱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훌쩍 문턱을 넘도록 의식 있는 소수가 지금부터 꾸준히 조직해 나아가야 한다.

최일봉 동지는 ‘맑스즘2007’에서 ‘러시아 혁명 - 오늘의 교훈’(7월 14일 2시 30분), ‘1987년 6월 항쟁’(7월 16일 12시), ‘전쟁과 신자유주의의 시대 좌파적 대안 건설’(7월 17일 4시 45분)이라는 주제로 연설한다.

고 유동적인 상황은 대중 운동이 민중 권력 기구들을 발전시킬 때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 혁명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1년여 뒤 독일·헝가리·오토만제국 등지에서도 혁명이 일어났다. 제2차세계 대전 종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중국, 남한 등지에서 혁명이나 준혁명이 일어났다.

1948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랍이 패배한 여파로 4년 뒤 이집트 왕정이 타도되고 나세르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다. 1956년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한 전쟁의 여파로 1958년 이라크에서 혁명이 일어나 친영 왕정을 타도했다. 1962년 이래 포르투갈의 파시스트 정부는 아프리카 식민지 앙골라·모잠비크·기니비소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1974~75년 포르투갈 자체 내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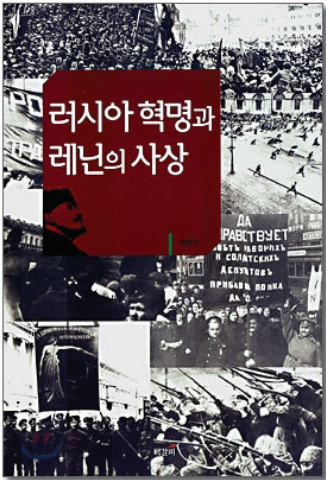
이 모든 경우에 전쟁은 의도치 않게 혁명의 산파 구실을 했다. 물론 전쟁 초기엔 애국주의가 득세하기가 십상이다.(1914년 독일에서 애국주의

광풍을 만난 룩셈부르크는 잠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중엔 분위기가 달라지곤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도 만일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일이 격돌한다면 한반도는 전쟁터가 될 뿐 아니라 혁명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훨씬 더 있을 법한 상황은 중동에서 먼저 혁명적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 기층민들이 더는 지금처럼 못 살겠다며 민중 항쟁을 일으키고 사회 상층이 기존 지배 방식대로 지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 도래하면 사람들은 사회의 미래를 놓고 대안을, 해결책을 (혁명이나 파시즘 같은 극단적인 것을 포함해) 모색하게 된다.

20세기 전반부의 자본주의는 대규모 전쟁과 경제 위기로 점철되면서 이러한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 냈다. 21세기 초의 자본주의도 세계화가 빚어내는 혼돈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책갈피, 최일봉 저)

파키스탄 ‘붉은 사원’ 학살

‘테러와의 전쟁’이 부른 또 하나의 참극

7월 10일 파키스탄 정부군이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붉은 사원’을 공격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 1주일 간 봉쇄 과정에서 이미 10여 명이 사망했고, 이날 새벽부터 시작된 공격과 이를 동안 지속된 진압 작전으로 첫 날에만 1백 명 가까운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빈민층 출신인 사원 부설 기숙학교의 학생들이었다. 그들의 가족과 친척 들은 사원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참극을 지켜봐야 했다. 사원 안에 두 아들이 있다는 바드샤 레흐만은 로이터 뉴스 기자에게 “그[파키스탄 대통령 무사라프]가 달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파키스탄의 친미 군사정권 독재자 무사라프는 급진 이슬람주의 세력들에 더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들어주고 국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유혈 참사를 저질렀다.

공격 직전에 정부 고위 관리들과 사원 지도자들 사이에 타협이 이뤄졌지만 무사라프는 끝내 이를 무시하고 무력 진압을 명령했다.

부시는 무사라프가 “이 극단주의자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강력한 동맹 상대”라며 “그에게 감사한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이 극단주의자들”은 사실, 파키스탄 정권과 미국 자신이 그 지역에서 추구한 정책들의 부산물이다.

1960년대 이후 파키스탄의 역대 군사정권은 ‘붉은 사원’을

적극 후원하고 그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얻었다.

1970년대 말에 집권한 지아울 하크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맞서 싸우던 무자헤딘을 지원하는 통로로 ‘붉은 사원’을 이용하며 그 대가로 지금의 ‘붉은 사원’ 부지를 제공했다. 미국 CIA와 손잡고 오사마 빈 라덴 등 무자헤딘을 적극 지원한 파키스탄 비밀경찰 ISI의 본부 건물이 ‘붉은 사원’ 근처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붉은 사원’과 파키스탄 정부의 유착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무사라프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지원하자 ‘붉은 사원’을 비롯한 이슬람주의 세력들은 무사라프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2004년 ‘붉은 사원’ 지도자는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대인 북서변경주(州)에서 알카에다와 전투중에 사망한 파키스탄군 병사들은 이슬람 식 장례를 치를 자격이 없다는 파트와(명령)를 내렸다. 5백 명의 무슬림 학자들이 서명한 이 명령에 군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올해 초 무사라프 정부는 ‘붉은 사원’이 불법으로 토지를 점거하고 그 위에 기숙학교를 지었다며 이를 철거하려 했다. 기숙학교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도서관을 점거하고 오히려 샤리아(이슬람 율법)의 강제 시행을 요구하며 DVD 판매점을 공격하고 안마시술소의 중국인 여성들을 납치해 중국 정부의 거센 항의를 사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대법원장 해임을

‘테러와의 전쟁’은 정치적 불안정과 위기를 심화시켜 끔찍한 참극을 놓고 있다

계기로 대중적 민주화 운동이 갑자기 분출하며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했다. 미국 주류 정치권에서도 무사라프의 통치 능력에 대한 회의가 제기됐다.

오사마 빈 라덴

그래서 무사라프는 반정부 운동에 본패를 보여 주고 미국 지배자들에게 파키스탄에서 자신만이 정치적 대안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이미 무사라프가 ‘붉은 사원’ 사태를 핑계로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피해 가려 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파키스탄의 정치적 불안정과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더 많은 충돌을 부

를 공산이 크다.

이미 ‘붉은 사원’을 지지하는 수백 명이 파키스탄과 중국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한 채 시위를 벌였다. 대부분 지방의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들인 시위대는 무사라프 정권에 맞서 성전(지하드)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공격 하루 전에는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대인 북서변경주의 바자우르에서 주민 약 2만 명이 손에 총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붉은 사원’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무사라프에게 죽음을!”,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외쳤다.

‘붉은 사원’ 학살 사건은 ‘테러와의 전쟁’이 정치적 불안정과 위기를 심화시켜 끔찍한 참극을 부른 또 하나의 사례다.

이수현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양보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쓴다’는 산별교섭에 합의하자 보수 언론과 정부가 “아름다운 양보”라고 찬양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이번 합의가 뭔가 잘못됐음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언론은 “파업 없이 교섭으로 끝났다”는 점과 “정규직의 양보”를 “산별노조의 긍정적 효과”로 추켜세운다. 그러나 이것은 산별노조의 ‘부정적 효과’일 뿐이다.

산별노조는 노동자의 의식·조직을 발전시키는 더 강력한 파업·투쟁을 고무해야 한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정치 파업처럼 말이다.

또, ‘정규직의 양보’라는 방향 평준화가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을 통한 상향평준화를 추구해야 한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보여 주듯이 말이다.

분열을 조장할 모호한 합의

애초에 보건의료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병원이 거둔 막대한 진료 수익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쓰라는 노조의 요구는 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병원 측이 양보를 거부하자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인상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도 보건의료 사측은 어떻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할지 전혀 구체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정규직 임금 인상을 줄이겠다”며 정규직 양보 방안을 내놓았다. 정규직 현장 조합원들로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양보 때문에 자신들이 더 나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

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막연한 공문구만 합의하고 뒤통수를 치려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 투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보건의료노조가 예정대로 산별 파업에 돌입했다면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정규직의 양보로 투쟁

동자들이 더 많이 양보하지 않아 자신들의 처우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양보는 불가피한 것도 아니었다. 6월 말 파업전야제 때 6천여 명이 모였고, 이것은 ‘간부 파업’을 진정한 파업 투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확대하기보다 전

없이 타협하기’가 모범으로 제시되며 뉴코아·이랜드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현장 활동가들은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이 산별노조 건설의 올바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전지윤

원 복귀 명령을 내렸다.

결국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4~5.3퍼센트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 포함’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합의됐다.

산별노조의 이런 양보 협상은 앞으로 지부 투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박미혜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대의원)



정성진의 **맑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와 맑스 가치론의 폐기?

정성진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율주의는 오늘날 세계 진보진영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이다. 자율주의자들은 이른바 “다중의 자율성”을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그 중 네그리와 하트 같은 이들은 맑스의 노동가치론의 현재적 타당성을 부정하는 반면, 클리버나 홀러웨이, 본펠드 같은 이들은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맑스주의의 핵심인 노동가치론을 부정하는 이들까지 “자율주의적 맑스주의”라고, 즉 맑스주의의 한 갈래에 포함시키기보다 그냥 “자율주의”라고 불러주는 것이 맞다.

6월 말 열린 ‘제3회 맑스코뮤날레’에서 한국의 대표적 자율주의 논객들인 조정환과 정남영은 오늘날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면서, 맑스의 노동가치론이 폐기되고 있다는 네그리와 하트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런데 네그리와 하트는 더는 맑스주의자라고 자처하지 않지만, 우리 나라에서 이들을 추종하는 이들 중 다수는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을 맑스주의의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다.

네그리와 하트는 《제국》과 《다중》에서 맑스의 노동가치론이 오늘의 변화된 세계를 설명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네그리와 하트는 오늘의 변화된 세계의 특징을 지식노동(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이나 감성노동(패스트푸드 업체 점원, 성노동자 등) 같은 비물질노동이 물질노동보다 중요해졌다는, 소위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 명제로 요약한다.

네그리와 하트는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 하에서는 IT(정보통신) 산업 노동자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자유시간)의 구분이 모호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정보재와 같은 비물질노동의 생산물은 일단 개발하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복제할 수 있으며, 그것의 생산에서 이른바 “일반 지성”이 결정적 구실을 하기 때문에 물질적 재화의 가치처럼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그 크기를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자본주의 내에서도 기계화·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맑스의 가치법칙, 즉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 규정이 지양·폐기되는 국면,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자체가 초월되는 국면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1857년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의 ‘기계에 관한 단상’을 그 전거로 제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 명제는 조금도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다니엘 벨 같은 부르주아 사회과학자들이 “탈산업사회론”이나, “정보사회론”, “신경제론” 또는 “지식기반경제론” 등

콜센터 노동자들 - 비물질노동은 물질노동의 기초 위에서 수행된다

의 이름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은 197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국면에 대처하려는 지배계급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판명된 지 오래이다. 그런데도 네그리와 하트의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 명제가 뭔가 색다르게 들리는 점이 있다면, 이 낱아빠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비물질노동”이나 “헤게모니” 같은 맑스주의적 용어로 치장해서 진보진영의 담론 속에 잠입시켰기 때문이다.

“일반 지성”

네그리와 하트는 물질/비물질 노동의 이분법으로 맑스의 가치론을 해석하고, 맑스의 가치론이 역사적으로 타당했던 시기를 “물질노동의 헤게모니” 국면으로 한정하는데, 이는 맑스의 가치론에 대한 무지와 왜곡을 잘 보여 준다.

맑스의 가치론에서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 즉 어떤 소재(물질 또는 비물질)가 생산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산관계에서 생산되는가 하는 것이다. 물질/비물질 노동의 이분법은 맑스 자신이 《잉여가치학설사》에서 비판한 아담 스미스의 접근이다. 맑스는 비물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임금노동에 의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생산된다면, 그 비물질에도 가치와 잉여가치가 체현돼 있다고 보았다.

또, 물질노동이든 비물질노동이든, 자본주의에서, 즉 착취와 억압에 기초한 사회에서 노동이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다는 자율주의자들의 주장 자체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맑스의 문제설정이냐 그림시의 헤게모니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 물질/비물질 노동의 이분법은 맑스의 문제설정과 무관할 뿐 아니라 역사적 자본주의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사적 자본주의에서 물질노동과 비물질노동은 처음부터 결합돼 있었으며, 오늘날도 비물질노동은 물질노동의 기초 위에서, 또 그것과 융합돼서만 수행될 수 있다. 예컨대 콜센터의 비물질노동은 컴퓨터나 전화, 광케이블 같은 물질적 생산수단과 결합돼 이루어진다.

지난 세기 말부터 러시아·동유럽·중국·인도 등지의 노동력이 글로벌 노동시장에 편입되면서 전 세계에서 물질노동은 급절로 늘어났으며, 21세기 “신경제”와 “디지털혁명”이 운운되는 속에서도 19세기형 “흑사공장”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물질노동에서 비물질노동으로의 헤게모니 이동은 자율주의자들의 관념 속에서나 존재한다.

또, 자율주의자들은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중 ‘기계에 관한 단상’에서의 언급을 근거삼아, 맑스가 자본주의 틀 내에서도 기계화의 진전이나 “일반 지성”의 확산에 따라 가치법칙, 즉 노동시간에 의한 상품 가치의 규정이 폐기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거두절미식 인용과 오독 또는 왜곡의 전형이다. 맑스가 그 부분에서 강조한 것은, 자본주의에서 기계화의 진전이나 “일반 지성”의 확산이 자본주의의 지양·초월을 위한 물질적 전제를 준비한다는 점이 었지, 이것이 가치법칙과 자본주의의 자동적 폐지를 가져온다는 점은 아니었다.

그리고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은 어디까지나 발표되지 않은 초고로서, 그 중요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맑스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10년 후인 1867년에 출판한 《자본론》 1권에서 기계화의 진전에 따라 자본주의가 자동으로 폐지되기는커녕 기계화가 노동생산성 향상

에 기초를 둔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의 메커니즘으로 뿐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같은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의 수단으로서도 작동함을 논증하고 있다. 즉, 맑스는 가치법칙이 기계화의 진전에 따라 축소·지양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성된 형태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사실, 지난 세기 말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나 오늘날 한미FTA를 두고 상품화, 가치법칙의 작용 범위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의자들처럼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 관철이나 “가치법칙의 소멸”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것이다.

잉여노동시간

또, 맑스는 《자본론》 1권에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일이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으로 나뉘기 때문에 노동이 원천적으로 저렴하므로, 노동 절약의 수단인 기계를 도입하는 데서 공산주의 사회와 비교해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논증했다. 이는 자본주의 틀 내에서도 기계화·정보화가 자본주의를 지양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극한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 자율주의자들의 관념을 앞질러 논파한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 규정, 즉 가치법칙의 필연성을 부정하는 자율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 즉 공산주의 상도 “노동일의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으로의 적대적 분리의 폐지”로 사고할 수 없다.

자율주의자들은 맑스가 〈고타강령 비판〉에서 제시한 노동시간 단위 계산에 의거한 경제 조절 원리를 스탈린주의 명령경제의 기원으로 간주한다.

자율주의자들은 자본주의 틀 내에서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가치법칙이 지양돼, 이른바 “다중 네트워크”라는 자신들의 대안 체제가 자생적으로 형성·확산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유주의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신해 세계 지배계급의 새로운 전략으로 정착되고 있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다중 네트워크”조차도 이른바 “사회적 자본”으로 편입·전화시키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오늘날 자율주의가 이미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자율주의와 맑스주의의 양립 불가능성, 소위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의 이론적·정치적 불가능성을 재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 정성진 교수는 ‘다함께’가 주최하는 진보포럼인 ‘맑시즘2007’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말한다’(7월 17일 오후 2시 45분)라는 주제로 연설한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아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전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왜 진보대연합인가? ②



지금중(전 문화연대 사무총장)

2007 대선과 진보대연합

‘진보대연합’의 필요성은 지난해부터 여러 진보정치 세력이 제기해 온 바 있으며, 최근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연합, 후보 단일화를 통한 선거연합, 진보 통합 신당 등 세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비교적 낮은 차원의 연합인 ‘정책연합’에서부터 비교적 높은 차원의 연합인 ‘진보 통합 신당’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선거연합방식은 ‘후보 단일화를 통한 선거연합’일 것이다.

정책연합만으로는 영향력이 작고, 진보 통합 신당 추진은 이념과 정책의 조율이 필요한 일인 데다 상호 신뢰 축적을 전제로 한 매우 고도의 정치력과 정치과정이 필요한 방식이어서 대선 전에 이뤄내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단기간에 이뤄지는 정치 세력 간 통합은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밥먹듯 하는 보수 정치권이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현실 가능하면서도 영향력이 있는 선거연합 방식은 정책연합을 기본으로 하고 후보 단일화를 통한 선거연합이라고 본다. 이 방식은 진보정치 세력 각 단위의 대선후보들이 각각의 조직 단위에서 선출된 뒤 다시 한번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치뤄 진보정치 세력의 단일 대선후보 선출을 이루는 것이다. 즉 이 단일후보로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정치 세력 간에 신뢰가 쌓이고, 정강·정책이 조율되고, 조직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통합 진보 신당으로 질적 전화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최근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진보연합 기준은 신자유주의 반대, 한미 FTA 반대(한미FTA 원천 무효), 비정규직 차별 철폐(비정규직 확산법 전면 개정), 사회양극화 해소, 전쟁 반대, 6·15 정신 계승, 한반도 평화 통일 실현,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주주의 심

화·발전(제반 반민주악법 개폐) 등에 동의하는 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소 층위가 다른 과제를 뭉뚱그려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큰 틀로 요약하면, 민주주의 심화·발전, 반전과 남북 평화공존과 협력·상생·통일 지향, 신자유주의 반대와 대안적 경제 모델 창출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진보의 가치와 시급한 과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정치 세력이라면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며, 여기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는 한미FTA 원천 무효 등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창조연대

한편, 최근 창당준비위를 발족한 ‘미래창조연대’를 비롯한 범여권 일각에서 신자유주의는 반대하지만 한미 FTA는 찬성한다거나, 개인적으로는 한미 FTA를 반대하지만 한미 FTA 반대를 정치적 진로의 원칙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어이없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한미 FTA 반대가 진보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미 FTA야말로 우리 사회를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고착화시키는 핵심 기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런 헛소리를 한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외면하는 것이라면 나쁜 것이다. 향후 ‘진보대연합’이 성사된다면 한미 FTA 문제를 부각시키고, 분명한 정치적 전선을 긋는 전술을 적극 구사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대략적인 추진 일정은 7월엔 연석회의 구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8월엔 진보대연합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 구성, 대통령 선거 공동 대응과 활동 방안 마련, 선거 강령 마련, 후보 단일화 방식 마련, 9월에는 민주노동당 후보 선출, 10월에는 민주노동당 의결 기구에서 최종안 확정 등이다. 10월 말, 11월 무렵에는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여타 진보정치 세력이 굳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일정에는 큰 무리가 없는 듯하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보대연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통해 일정을 합의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내부 경선 과정에서 후보 검증 문제가 불거져 이명박 후보 등의 중도 하차가 조심스레 점쳐지기는 하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극우보수 세력은 ‘보수대연합’을 획책하며 역사의 반동을 꾀하는 상황이다.

사이비 개혁 세력은 심각한 민심 이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연명을 위한 원칙 없는 이합집산에 몰두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며 나선 이른바 ‘시민사회 중심의 신당’ 추진 세력 또한 “대통합이 아닌 새 통합을 추구한다”는 말장난을 부리며 민의를 거스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인민을 더욱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럼에도 진보정치 세력은 인민들에게 아직 대안적 정치 세력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유일한 길은 인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좋은 정책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진보대연합’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지금중 전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말시즘2007’에서 ‘2007년 대선 — 진보대연합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7월 15일 오후 7시 30분)라는 주제로 연설한다.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 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겠습니까?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증면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소식 · 보고

연세의료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7월 10일 연세의료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다인병실 확대, 다면평가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보수 언론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한다며 비난하지만 정작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병원 측이다.

연세의료원은 그동안 돈벌이를 위해 병원 증축과 확장에만 열을 올린 반면 환자의 진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차별 개선은 한사코 외면해 왔다. 지난해에만 1천2백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진료 수익을 거두면서도 여건이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병원 측은 지난 2년 동안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의료기관’ 호칭을 얻으려고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



회) 인증에만 혈안이었다. 이 때문에 연세의료원 노조는 “전 직원의 건강 상태는 한마디로 ‘초토화’되 다시피 하고 피로의 극한에 도달했다”

며 이윤에 눈 먼 병원 측을 규탄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다면평가 제도가 지 도입했다. 다면평가 제도는 평균 이하 점수를 받으면 퇴출시키는 제도로 구조조정의 신호탄과 같다.

한편, 연세의료원 노동자들은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병실 확대’와 ‘간호1등급제 상향’(간호사 1인당 돌볼 수 있는 환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세의료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연세의료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한다면 뉴코아·이랜드 노동자 등 투쟁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다.

최영준

부산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의 승리

열흘 동안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부산교통공사 로비를 점거하고 투쟁을 벌였던 부산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이 전원 복직, 고용승계라는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는 애국단체원(HID)이라는 악명높은 새 용역업체를 핑계대며 7월 1일자로 3호선 2구역 30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해고했다.

이에 맞서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6월 26일부터 10일 동안 로비를 점거하고 단호하게 투쟁했다. 6월 29일 한미FTA 반대 민주노총 총력 결의대회에 참가한 2천5백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부산교통공사 앞에서 연대 집회를 열어 지원했고, 공공서비스연맹 부산지부와 정규직인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민주노동당도 적극적으로 연대했다.

결국 부산교통공사와 애국단체원은 노동자 17명을 전원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다.

박수원

독자편지

학교가 학생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부산 배정중학교에서 한문시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오리걸음 벌받던 학생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다 졸았다는 이유로 교무실에서 자료정리를 하던 고등학생이 숨졌다.

이 두 학생은 입시경쟁을 위해서라면 비인간적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한국 교육의 희생양이다. 그동안 이 나라 학교에 만연한 폭력과 체벌은 학생들에게 말

로 표현 못할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혀 왔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대구에서 체벌 2백 대 사건, 초등학교생이 뺨을 맞아 고막이 파열된 사건, 경기도 산본의 발바닥 2백50대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체벌은 공포감을 줘 학생을 일시적으로 제압하는 행위일 뿐 결코 교육의 방

편이 될 수 없다. 체벌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 가장 커다란 ‘학교 폭력’이다.

체벌의 원인은 단지 이성을 상실한 몇몇 교사들 때문이 아니다. 학생의 본분은 오로지 명문대 진학이라는 공식이 체벌과 각종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더는 학교가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나라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꿔야 한다.

박조은미

뉴코아의 비열한 파업 파괴 술책

점거파업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강남 뉴코아가 비열한 수법으로 파업을 파괴하려 한다. 뉴코아는 과거에 백화점이 었기 때문에 임대매장 위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각 매장에는 점주와 직원이 따로 있다.

또, 정기적으로 매장 자리 재배치와

입·퇴점을 결정한다. 당연히 점주들은 뉴코아측에 잘못 보이거나 매출 저하로 퇴점당할까 봐 불안해 한다.

강남뉴코아의 지점장은 점주들을 불러 모아 “실제로 매출이 저하하면 점주들도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 우리가 전면에 나설 수는 없으니 당신들이 파업을

막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실제 내가 만나본 다수의 점주들과 매장 고용 직원들은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해고를 안타까워하며 싸움이 승리하길 바라고 있다. 노동자들이 단호한 파업을 벌이며, 이랜드가 점주들에게도 자행한 횡포를 고발한다면 강남 뉴코아 지점장의 비열한 술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장미순

지역 사회포럼

서울 서부

맑스주의와 생태주의

일시: 8월 8일(수) 오후 7시 45분

연사: 장호중(주간 <맛불> 기자)

장소: 토즈(신촌역 3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문의: 017-267-0400

서울 중부

맑스주의와 여성 해방

일시: 8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센터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동소문우체국 5층)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서울 동부

쿠바 — 신화와 현실

일시: 8월 21일(화) 오후 7시 30분

연사: 김용민(주간 <맛불> 기자)

장소: 동부여성플라자(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9731-7299

서울 남부

일본 군국주의화와 미일동맹

일시: 8월 22일(수) 오후 8시

연사: 이정구(경상대 경제학 강사)

장소: 방배동사무소(방배역 3번 출구)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2401-1987

대학 맑스주의 포럼

서울 북부지역 대학

대선 이후: 프랑스는 우경화하는가?

일시: 7월 24일(화) 오후 4시

장소: 고려대학교

문의: 016-9353-5619

서울 동부지역 대학

쿠바 — 신화와 현실

일시: 8월 7일(화) 오후 4시

연사: 김용민(주간 <맛불> 기자)

장소: 한국 외국어대학교

문의: 010-6636-5349

로자 룩셈부르크와 대중파업

일시: 8월 21일(화) 오후 4시

연사: 김어진(민주노동당 서초구위원회 위원장)

장소: 건국대학교

문의: 010-6636-5349

서울 남부지역 대학

민족과 계급

일시: 8월 7일(화) 오후 3시

장소: 성공회대학교

문의: 011-9825-9753

서울 서부지역 대학

지구적 환경 위기 — 대안은 무엇인가?

일시: 8월 7일(화) 오후 4시 30분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문의: 010-9880-9193

반인권 · 반노동자적 보안관찰제 폐지하라!

대구경북건설노조 전 위원장 조기현 동지, 포항건설노조 투쟁으로 구속됐던 유기수 · 지갑렬 · 최규만 · 진남수 동지, 기아차 광주지부 대의원 김기영 · 김문섭 동지, 한미FTA 투쟁으로 구속됐던 류봉식 동지 등 집행유예와 ‘보안관찰 처분’을 동시에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출소한 동지들은 악랄한 보안관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계속되는 인권 유린에 시달려야 한다.

보안관찰은 피보안관찰자의 자유를 매우 광범하게 침해한다. 신체의 자유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교우 관계와 재산 상황까지 신고하도록 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 그리고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 · 통신 금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 시위 출입 금지” 등을 통해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침해한다.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재구속되는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보복성 재구속은 담당 검사와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도 가능하다.

게다가 보안관찰 처분은 2년마다 갱신될 수 있는데 면제를 받으려면 준법서약서를 써야 한다. 이는 일종의 사상전향제 구실을 하며 사상 ·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조기현 동지는 보안관찰이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 전념하거나, 동지나 조합원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그 반노동자성도 폭로한다. 지배자들은 옥중에서 투지를 버리고 출소한 투사들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전투성을 확산시킬까 봐 두려운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인권 · 반노동자 악법인 보안관찰법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보안관찰법의 아버지 격인 사회안전법이 1987년 대투쟁의 결과로 1988년에 폐지됐듯이, 강력한 대중 투쟁을 건설할 때 악법 없는 세상으로 전진할 수 있다.

김태규

‘동명부대’ 파병

노무현 정부가 기어코 레바논 파병을 강행했다. 7월 5일 레바논 파병 한국군(‘동명부대’) 선발대 61명이 레바논에 도착했고, 오는 19일에는 나머지 부대원들이 모두 출국할 예정이다. 그리 되면, 모두 3백50여명의 중무장한 특전사 부대원이 레바논에 주둔하게 된다.

정부는 레바논 파병은 유엔결의안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엔군의 레바논 파병을 결정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701호’ 자체가 제국주의적 위선으로 가득하다.

지난해 7월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불법 침공했지만 헤즈볼라가 이끈 레바논 민중의 영웅적 저항에 부딪혀 전쟁 목적 □ 즉 헤즈볼라 분쇄(또는 적어도 무장해제) □ 을 성취할 수 없었다.

‘유엔안보리결의안 1701호’는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과제를 유엔군을 통해 이루려는 서방 □ 특히 미국과 영국 국 의 책략에 불과했다.

이것은 현재 레바논에 파병된 유엔군 사령관 클라우디오 그라지아노도 공공연히 시인하는 사실이다. 그는 7월 3일 이렇게 말했다. “유엔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레바

논 무장 단체들[헤즈볼라]이 은닉한 무기들을 찾아내고 이를 레바논 정부군에 넘겨주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반면, 이스라엘의 불법 국경 · 영공 침범이 계속되고 있지만, 유엔군은 이를 못 본 척하기 일쑤다.

폭탄 공격

한국 정부는 또, 파병에 대한 반감과 우려를 무마하려고 파병 지역인 레바논 남부가 안정된 지역이라고 선전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유엔군을 겨냥한 폭탄 공격은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밝히 드러냈다. 이 공격이 일어난 지역은 한국군 파병 예정지인 티르에서 겨우 20킬로미터 떨어진 곳이고, 여러 언론들은 레바논 내의 다양한 무장 단체들이 유엔군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한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 “현지 상황으로 볼 때 실질적 교전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부대는 동명부대가 사실상 처음”(7월 5일치 사설)이라며 걱정하고, 국책 연구기관의 교수가 정부의 안전 홍보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지

기] 안전한 지역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한편, 이처럼 불안정하고 “위협이 상존하는” 환경에서는 이른바 “자위권 차원의 선제공격”이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레바논인들이 한국군 파병을 반긴다는 정부와 우익 언론들의 주장도 터무니없다. 최근까지 레바논에 머물며 전쟁의 참상을 폭로해 온 박노해 시인은 지난 11일 레바논 파병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내 유력 신문사와 방송사[는] … 레바논 주민 대다수가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환영한다는 듯이 레바논 현지 특파원을 통해 잘못된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군 전투병 파병에 반감이 깊어지고 있는 레바논의 민심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한국이 레바논 침공에 침묵 · 동조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레바논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구성에 기권표를 던진 것을 레바논 아이들조차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전투병이 파병되면 반감의 표적이 되고 있는 우리 병사들은 스페인 병사들처럼 비극적 상황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정부는 당장 레바논 파병을 중단해야 한다.

12일에 있었던 ‘레바논 침공 1년 규탄 기자회견’에서는 40여 명의 반전평화 단체 회원들이 모여 “자이툰 부대 철수”, “레바논 파병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라크 문제로 혼란에 빠진 미국 공화당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논쟁이 백악관 안에서 갑자기 폭발했다.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갈수록 줄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라틴 아메리카 순방을 취소해야 했다.

그러나 조지 부시의 공화당이 철군 문제로 내홍을 겪는 반면, 부시 정부의 정책들을 좌우하는 네오콘들은 이라크에서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긴장의 이면에는, 이라크에서 군사적 패배라는 굴욕을 피하고 싶은 미국 지배계급 일부의 필사적 욕구가 놓여 있다. 베트남 전쟁 패배는 [미국 외교 정책에] 오랜 기간 암운을 드리웠다.

이번 주에 부시 주위에 모인 네오콘들은 미군을 계속 “증파”해 이라크에서 질서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이미 벽에 부딪혔고 성공할 기미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미국인의 약 70퍼센트가 이라크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화당원의 42퍼센트가 미군이 일부라도 철수하기를 원한다는 통계도 있다. 갑자기 폭발한 철군 논쟁은 미군 철수 시기를 앞당기기만 할 것이다.

이 글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009호(7월 14일차)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탄압하는 더러운 ‘삼각 동맹’

민주노동당과 진보 운동에 대한 ‘청와대 감독, 검찰 주연’의 공동 탄압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7월 3일 오종렬 · 정광훈 한미 FTA 범국본 공동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6일에는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이용식 민주노동총 사무총장을 강제 연행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권영길 · 천영세 · 단병호 의원도 기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재벌이 트럭으로 갖다 바치는 돈”과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푼푼이 나온 돈”을 똑같이 취급하는 정치자금법이야말로 년센스다. 조합원 1인당 2천

원씩 모은 민주노동총의 후원금까지 불법이라면, 어떻게 ‘깨끗한 돈’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한편, 7월 9일 노회찬 의원은 삼성 X 파일 사건 때 삼성에게서 돈을 받은 ‘떡값 검사’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노회찬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며, “이학수 · 홍석현 · 이건희도 [법정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당당히 요구했다.

‘떡값’ 검찰의 ‘이건희 구하기’나 얼마 전 폭로된 경찰청장 이택순의 ‘김승연 구하기’는 이 나라 청와대 · 검찰 · 자본의

더러운 삼각 동맹을 생생히 보여 준다.

이런 탄압을 통해 ‘삼각 동맹’이 얻고자 하는 바는 명백하다. ‘불법’ 논란을 통해 대선 · 총선을 앞둔 민주노동당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무엇보다 민주노동당의 가장 유력한 정치 자금 원천인 노동자들의 소액 후원을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또, 한미FTA 반대 운동을 탄압해 대선 ·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불러일으킬 ‘바람’을 미리부터 잠재우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총은 이 기회에 연대를 더 공고히 하며, 이 더러운 ‘삼각 동맹’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